

건설동향브리핑

제513호 (2015. 6. 1)

■ 정책 · 이슈

- 건설업체 사회적 책임, 건설산업 신뢰 구축에 필수적
- 건설산업의 해외 물산업 진출 전략 점검

■ 경영 · 정보

- 2015년 건설투자 2.9~3.1% 증가 예상

■ 경제 동향

- 2015년 상반기 분양물량 2000년 이후 최대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란 : 건설업 영업범위 폐지, 바람직한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건설업체 사회적 책임, 건설산업 신뢰 구축에 필수적

- 건설업체의 사회적 책임 경영에 대한 반성과 혁신 방향 -

■ 건설산업 신뢰 회복의 필요성

- 잇따른 대형 건설공사 입찰담합 사건들로 인해 건설산업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고 있음.
 - 2014년에는 18건의 입찰담합 사건이 발생하여 월 1~2회꼴로 대형 건설공사의 입찰담합 사실이 적발되었음.
 - 2015년 들어서도 새만금 방조제 조성공사 등 6건의 입찰담합이 적발됨.
- 2013년부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비정상의 정상화’ 정책은 올해 들어 100대 과제를 발표하고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국무총리실 산하 ‘부패척결단’에서는 2015년 들어 검경 등과 합동으로 공공, 민생, 경제 금융 분야의 부패척결을 추진 중임.
- 건설업계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경쟁적으로 기업 내 윤리경영 실천을 위하여 조직의 신설 및 각종 내부정책을 도입하였고, 대외적으로 크게 홍보를 추진하였음. 이와 함께 2000년대 후반부터는 상생협력 등 공정거래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면서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을 본격적으로 도입해왔음.
-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건설사업의 특성상 일찍부터 건설업체들의 사회공헌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들에 대한 윤리성과 신뢰성에 대한 국민 및 정부의 인식은 여전히 낮은 수준임. 2013년도 건설업체에 대한 이미지조사에 따르면 국가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전문성에 대한 이미지 평가는 높은 반면, 투명성, 신뢰성, 합리성에 대한 평가는 매우 낮게 나타남.

■ 건설업체의 새로운 사회적 책임 정의 필요

- 일반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 국가 사회의 목표나 가치관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단순한 이윤추구를 초월하여 기업의 이해관계집단을 포함한 사회의 복지

에 공헌하도록 경영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책임'을 말함.

- 이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범위는 경제적, 법률적, 윤리적, 박애적 책임 등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범위는 건설산업과 건설업체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사회적 책임을 정의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경제적 책임' 즉, 내부 직원들과 외부 소비자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는 것과 '법률적 책임' 즉, 법으로 준수하는 책임, 법에서 요구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윤리적 책임', 기업 내·외부를 넘어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하는 '박애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필요함.
 - 건설업체에 대하여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는 사회적 책임 경영의 목표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음.

■ 건설업체 사회적 책임 경영의 새로운 정립 방향

- 기존 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책임 경영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재점검과 목표의 재설정이 필요함.
 - 윤리경영, 사회공헌활동 등의 추진에 있어 단편적으로 추진되어 온 각각의 제도나 프로그램을 실천성과 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이 요구됨.
 - 또한, 임직원들의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추진의지를 명확히 하는 사회적 책임 경영의 추진 목표 및 실천 체계를 재설계해야 함.
- 사회적 책임 경영을 기업 내 체화된 기업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함.
 - 기업문화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업문화의 요소 즉, 시각적인 요인과 정신적인 요인, 활동적인 요인의 통합적인 노력이 필요함.
 - 사회적 책임 경영을 강력히 추진한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노력도 필수적임.
 - 이와 함께 최고경영자에서 일선 실무자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책임 경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등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함.
 - 실제 업무에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행동이 나타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회적 책임 경영 평가 및 활동의 지속적인 매뉴얼화 등이 요구됨.

김영덕(연구위원 · ydkim@cerik.re.kr)

건설산업의 해외 물산업 진출 전략 점검

- SWOT 분석 통해 적극적 진출 전략 모색 -

■ 제7차 세계미래물포럼 계기로 해외 물시장에 대한 관심 급증

- 지난 4월 12~17일 간 대구·경북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제7차 세계미래물포럼을 계기로 해외 물시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본고에서는 SWOT, 즉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Opportunities(기회), Threats(위협) 등 4개 부분의 분석을 통해 건설산업의 해외 물시장 진출 전략을 모색하고자 함.

■ 강점(Strength)

- 국내 건설업체들은 지리적으로 물산업 수요가 급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과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물산업 관련 시설 시공 경험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음. 또한, 담수화 플랜트의 필수 요건인 발전 플랜트 건설에 대한 노하우와 기술 경쟁력도 풍부함.

■ 약점(Weakness)

- 물산업 육성에 필요한 국내 산업 생태계가 여전히 조성되어 있지 못함.
 - 가장 규모가 큰 상·하수 운영시장 진출에 필요한 사업 경험을 국내에서 축적할 여건이 결여되어 있어 국내 건설업체들이 실제로 진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국내 건설업체들이 해외 물시장에 진출한 경우에도 기술력 부족과 부품·소재 산업의 낮은 경쟁력으로 물산업의 수익성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물산업의 특성에 적합한 정책 및 금융 지원 체계가 완비되어 있지 못함.

■ 기회(Opportunities)

- 지리적·문화적 측면에서 접근성이 높은 아시아와 중동 및 아프리카시장을 중심으로 빠른 경제 성장과 인구 증가, 급속한 도시화에 의한 수요 증가, 그리고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심각해진 물 부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수자원 확보 수요 발생에 따라

시장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됨.

-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물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2009년 이후 지속되고 있음.

■ 위협(Threats)

- 세계 물시장이 큰 규모를 형성하고 빠른 속도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민영화 경향도 지속되고 있으나,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물산업이 지니는 중요성으로 인하여 해외 물시장의 진입 장벽은 낮지 않음.
 - Veolia, Suez 등 상위 5개 글로벌 기업의 세계 물시장 점유율이 2001년 73%에서 2012년에는 32.6%로 하락. 이는 자국 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국의 물기업에게 더 많은 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때문임.
 - 2013년 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15대 물기업에 포함된 중국 4개사, 브라질 2개사, 영국 1개사, 싱가포르 1개사 등은 자국 내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전략 방안

강점-기회 전략	강점-위협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육성 정책에 부응하여 물산업에 진출함으로써 사업 다각화 추진 - 시공 경험이 풍부한 중동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아시아 지역에서 시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 경험과 문화적·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함을 기반으로 성장성이 뛰어난 중동과 아시아지역 물시장의 제도적 환경에 대한 이해를 통해 미국, 유럽 기업 대비 경쟁 우위 확보 - 정부와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 간 공동 행동을 통해 경제 전반에 걸쳐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 이미지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 조성, 해외사업 추진에 필요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해외 물기업 인수, 기술개발, 부품·소재 기업 육성 등을 위한 자금 및 정책 지원 방안 마련 - 분리막 등 핵심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부품·소재에 특화된 중소·중견 기업을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우수 기술 및 운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과 다양한 합작투자자와 인수·합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및 자금 지원방안 마련 - 기술 연구개발(특히, 역삼투압 방식), 인재 육성정책 및 자금 지원 방안 도입 - 다양하고 내실 있는 정부의 정책 및 자금 지원방안을 통해 상·하수도 운영시장 진입에 필요한 사업경험을 축적할 수 있고, 중소·중견 기업이 핵심부품·소재 생산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 조성
약점-기회 전략	약점-위협 전략

빈재익(연구위원 · jipin@cerik.re.kr)

2015년 건설투자 2.9~3.1% 증가 예상

- GDP 3%대 성장 위해선 하반기 건설투자 4% 이상 증가 필수적 -

■ 올해 GDP 전망치 3%로 하향 조정, 건설투자 성장률도 기존 예상치보다 저조

- 최근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요 기관들은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3%대로 하향 조정함.
 - 기관들은 작년 하반기에 올해 경제성장률을 4%에 근접한 3.8~3.9%로 예상하였으나, 올해는 전망치를 3.0~3.1% 수준으로 내림.
 - 이는 올 1/4분기에 수출이 감소하고 소비가 둔화되는 등 예상보다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임.
- 특히, 경기에 민감한 건설투자 성장률도 기존에는 3% 후반에서 4% 초반으로 예상하였으나, 2.9~3.1%에 그칠 전망이다. 결국 올해 3% 이상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하반기 건설투자 회복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통화·재정 정책이 요구됨.
 - 1/4분기 건설투자는 0.7% 증가에 그치며 성장률이 저조한 상황으로, 가장 최근에 전망치를 발표한 KDI의 올해 상반기 건설투자 성장률 전망치는 1.5%에 불과함.
 - KDI는 올해 구조개혁 정책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통화·재정 정책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로 하락할 수도 있다고 밝힘.
 - 결국 올해 3%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소비 위축이 투자와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경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건설투자 회복이 필요, 건설투자는 하반기에 최소 4%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해야 할 것으로 분석됨.

<최근 국내 기관이 발표한 2015년 GDP 전망치>

(단위 :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기관	연도	GDP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수출	수입	소비자물가	실업률
한국은행 (4월 9일)	상반기	2.7	2.1	3.1	5.2	-0.6	1.1	0.5	3.8
	하반기	3.4	2.6	3.7	5.6	6.3	4.9	1.3	3.2
	연간	3.1 (3.9)	2.3 (3.5)	3.1 (3.3)	5.4 (5.9)	2.9 (5.5)	3.0 (5.7)	0.9 (2.4)	3.5 (3.3)
KDI (5월 27일)	상반기	2.6	2.2	1.5	5.5	-0.3	1.8	0.5	3.9
	하반기	3.3	2.6	4.1	4.9	2.5	3.4	0.6	3.3
	연간	3.0 (3.8)	2.3 (3.2)	2.9 (3.8)	5.1 (6.8)	1.1 (7.4)	2.6 (7.9)	0.5 (2.3)	3.6 (3.3)

주 : 괄호는 한국은행의 경우 지난 2014년 10월, KDI의 경우 2014년 5월에 예측한 수치임
자료 : 각 기관

■ 정부소비와 금리변화가 하반기 건설투자에 큰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

- 하반기 정부의 주요 수단별 통화·재정 정책이 건설투자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 하반기 정부소비가 예상보다 5%, 금액으로는 대략 5조원이 추가적으로 증가할 경우 건설투자는 기존 전망치보다 0.28%p 더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
 - 총통화가 예상된 것보다 5% 더 증가할 경우 건설투자는 0.19%p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기준금리가 0.5%p 추가적으로 인하될 경우 건설투자는 0.08%p 정도 더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이는 2000년 1/4분기~2014년 2/4분기까지 분기 시계열 자료를 활용, 행태방정식 24개와 정의식 12개를 포함하는 연립방정식으로 구성된 거시계량모형으로 분석한 결과임¹⁾.
- 결국 최근 상황을 감안하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으로 인한 정부소비 증대 또는 금리변화가 건설투자의 주요 변동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지난해부터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정부 기본방침으로,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경기부양책이 수반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정부소비가 증가하고 이는 건설투자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수출 감소와 경기 둔화로 세수 확보가 불확실한 가운데 금리 인하책이 사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
 - 비록 5월 말 기준금리가 1.75%으로 최저 수준으로 조정이 다소 어렵지만, 경기 회복이 지연될수록 하반기 금리 인상 압력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하반기 정부 정책에 따른 건설투자 파급효과 변화 시나리오>

(단위 : %p)

구분	건설투자			토목
		주거용 건축	비주거용 건축	
정부소비 5% 증액시	0.28	0.30	0.28	0.26
총통화 5% 증액시	0.19	0.18	0.41	0.00
기준금리 0.5%p 인하시	0.08	0.22	0.06	0.02

자료 : 박철한·이홍일, Working Paper 2015-01, '대의 환경 및 정책 변화의 건설산업 파급효과 분석'

박철한(책임연구원 · igata99@cerik.re.kr)

1) 가상의 시나리오를 넣어 추정된 값으로, 박철한·이홍일(2015.4) Working Paper 2015-01, '대의 환경 및 정책 변화의 건설산업 파급효과 분석'의 분석결과를 활용함.

2015년 상반기 분양물량 2000년 이후 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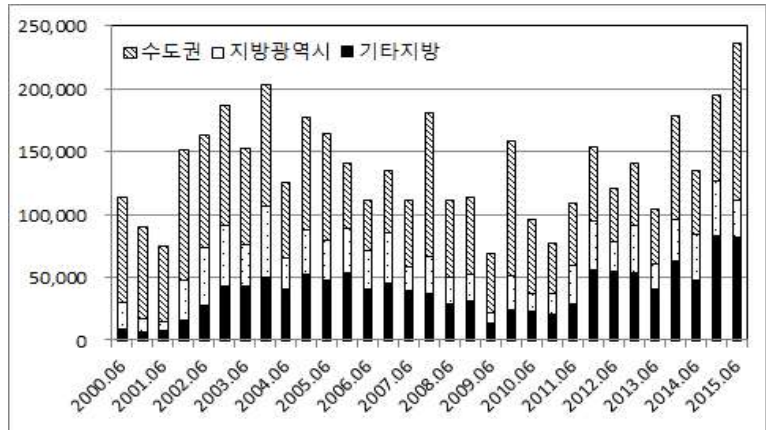
- 청약경쟁률 높고 분양권 거래 증가세, 지역별 수급은 부조화 -

■ 2015년 상반기 전국 분양물량, 통계 작성 이래 최대

- 2015년 상반기 전국 분양물량은 23만 6,442호로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0년 이래 최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일반적으로 하반기에 더 많은 물량이 분양되지만 2015년 상반기는 이례적으로 많은 편임.
- 수도권 물량 비중이 최근 4년간 50%를 하회하였으나, 올해 들어 50%를 상회함.

<반기별 분양물량 추이>

(단위 :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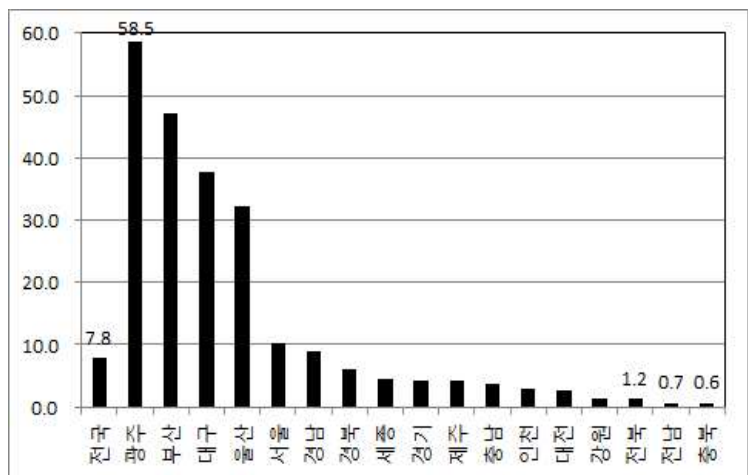
주 : 2015년 상반기에는 일부 분양예정물량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 부동산114(주)

■ 2015년 상반기 전국 청약경쟁률 7.8:1

- 2015년 상반기 전국 청약경쟁률은 7.8:1의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미달을 보임.
-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지역이 1:1을 넘어선 가운데 지방광역시들이 특히 높은 경쟁률을 보임(광주 58.5:1, 부산 47.2:1, 대구 37.7:1, 울산 32.1:1, 대전 2.6:1).
- 반면, 전남(여수시, 광양시, 영암군)과 충북(충주시, 음성군, 진천군, 옥천군)은 1:1 이하를 보이면서 미달됨.

<2015년 상반기 지역별 청약경쟁률>

(단위 : 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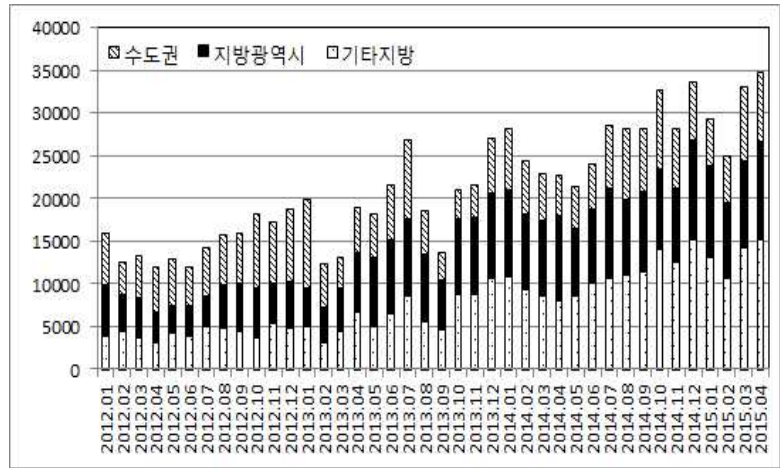


자료 : 금융결제원

■ 분양권 거래 증가 추세

<월별 분양권 거래 추이>

(단위 : 호)



자료 : 온나라부동산정보 종합포털

- 전국 분양권 거래량은 최근 2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2015년 4월 분양권 거래량은 통계가 작성된 2006년 이래 최대치를 보임.
- 전국 분양권 거래량은 2월 2.5만호→3월 3.3만호→4월 3.5만호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최근 지방광역시와 기타지방에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도권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분양시장 실수요 및 투자수요 집중, 수요와 공급은 불균형

- 2015년 상반기 전국 분양시장을 보면 청약경쟁률이 높고, 분양권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수요자가 분양시장에 집중되고 있음. 그러나, 지역별 수요와 공급은 상호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
- 청약경쟁률이 높고 분양권 거래 증가세가 확인한 지방광역시는 분양물량이 전기 대비 감소한 것에 반해, 수도권은 일부 지역에서 1순위 청약경쟁률이 미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 대비 2배 가량 증가함.
- 한편, 2015년 5월 27일 현재까지 집계된 2015년 하반기 분양계획 물량은 상반기보다 감소한 16.1만호에 이를 것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 수도권 10.1만호, 지방광역시 1.3만호, 기타지방 4.8만호로 나타나 분양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부조화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하반기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라 분양시장의 수요에도 변화가 예상됨.

엄근웅(책임연구원 · kyeom@cerik.re.kr)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5. 26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기금과 주최, '국민주택기금심의위원회'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실장 참여 - MBS 매입 및 청약저축 금리인하 관련 논의
5. 27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정책과 주최, '글로벌 건설경쟁력 향상을 위한 건설 분야 청년층 일자리 창출 대책 토론회'에 건설정책연구실 김민형 연구위원 참여 - 건설 분야 일자리 창출 관련 논의
5. 28	서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안전본부 주최, '제1차 총괄건설정책자문단 회의'에 건설정책연구실 최민수 실장 참여 - 싱크홀 특별대책 및 개선계획 논의 등
5. 29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주최, '제58차 조정 분과위원회'에 건설관리연구실 이영환 연구위원 참여 - 하자 심사 안건 논의

■ 「입찰참가자격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국회 함진규 의원실은 지난 5월 29일(금) 「입찰참가자격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함.
-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산업연구실장이 '현행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음.
- 이번 토론회는 중복·과잉 처벌 논란을 빚고 있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어 정부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됨.

■ 「민간투자사업(BTO/BTL) 추진 전문과정」 개설

- 일 정 : 2014년 6월 9일(화)~11일(목), 3일 21시간
- 장 소 : 건설회관 9층 건설산업연구원 연수실(강남구 논현동 소재)
- 대 상 : 건설업체 실무자, 유관기관 및 단체 등
- 교육비 : 45만원/인
 ※ 고용보험 납부 사업장의 재직자일 경우 교육비 중 일부 환급
- 문의 : 기업지원팀(Tel. 02-3441-0848)

건설업 영업범위 폐지, 바람직한가?

최근 소규모복합공사 확대 논란을 계기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종 간 영업범위 폐지에 관한 논의가 발생하고 있다. 건설업 영업범위 폐지는 지난 2009년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는데 그 이유는 전제조건이 미충족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보고서를 보면 영업범위 폐지의 전제조건으로서 발주자 역량 강화, 입찰평가 기준이나 방법 개선, 발주자 자율권 및 책임성 강화, 보증 및 보험제도 강화를 꼽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느 하나도 충족된 것이 없다.

건설업 영업범위 폐지는 개별 발주자에게 재량을 주느냐, 아니면 정부 통제가 필요한가라는 문제로 귀착된다. 이론적으로는 발주자에게 모든 자율권을 부여하여 자유롭게 생산체계를 결정하도록 권한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회문화 환경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학입시를 보면 아직까지 국가에서 수능시험을 실시하고, 각 대학의 자율권을 허용치 않고 있다. 즉, 객관성과 공정성을 특히 강조하는 사회 환경을 이해해야 한다.

특히 공공 분야는 스크리닝 기능이 미흡하다. 결국, 영업범위가 폐지되면 부적격자의 시장 참여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또, 민간시장은 시장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최근 건설업면허 불법 대여사건을 보면 과히 그렇지 않다. 특히 중소기업의 매매나 분양목적의 건축물 시공에서는 세금탈루나 시공비용 저감을 목적으로 불법적인 도급 행위가 많다. 결국, 영업범위가 폐지되면 이러한 행위들이 오히려 합법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 영업범위 제한을 폐지했다고 해서 건설업종 간 업역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수도 없다. 오히려 갈등이 더 커지고 전선이 넓어질 수 있다. 그 이유는 수많은 개별 공공발주기관별로 발주방법을 놓고 건설업종 간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또, 기업 규모별이나 지역별 갈등이 커질 우려가 존재한다.

결국 건설업 등록으로부터 공공입찰, 시공관리, 보증보험, 사후평가 제도 등이 정비되어 적합한 선별 기능을 갖추고, 발주자의 역량이 강화된 상태에서 비로소 건설업역이나 영업범위 폐지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08년에 종합과 전문건설업종 간 겸업제한이 폐지된 바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해당 업종 등록을 통하여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건이 성숙치 않은 상태에서 영업범위 폐지는 결과적으로 시공자격만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사회가 부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토자원경제, 2015. 5. 18>

최민수(건설정책연구실장 · mschoi@cerik.re.kr)